

4%대 고물가속 성장률 둔화... '경고음' 울린다

조여오는 '공포'

IMF·세계은행,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
코로나·러시아 전쟁 등 공급 측면서 인플레이션
한국경제는 4%대 고물가·성장률 3.0% 하회
경제전문가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급등) 우려가 세계 곳곳을 위협하고 있다. 4%대 고물가와 성장률 둔화 속에 한국 경제도 이른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전쟁과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중국 성장 둔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3.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월(4.4%) 전망 대비 0.8% 하락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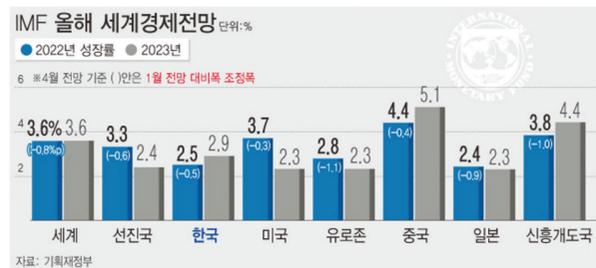
세계은행(WB)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4.1%) 대비 0.9% 내린 3.2%로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를 반영해 전망치를 3개월 만에 1% 가까이 내린 것이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5.7%에 달했다.

현재 세계 경제를 덮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치솟고 원자재와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공급 측면이 강하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자체 연구결과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기 회복 둔화라는 두 가지 위험이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미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재무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인플레이션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5월 회의에서는 50bp(0.5% 포인트)가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빅스텝’(Big step: 기준금리 0.5% 포인트 이상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세계 경제에 따라 한국 경제도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기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 수준인 3.0%를 밑도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4.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긴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수준인 3.0%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률이 4% 정도라 높기는 한데 이 정도 성장하면 물가가 다소 높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변동에 취약한 한국 경제도 이미 인플레이

션이 시작됐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S의 공포'를 피해 가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한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통화량을 많이 풀고 코로나 이후에도 재정 지출을 많이 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좋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어서 충격이 크다”면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성장률보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몰라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하 높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내내 하반기 이후부터라고 인정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침체된다 고 봐야 한다.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라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긴 이르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도 잡고 침체도 막아야 해 경제학에서 가장 난제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특수상황에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고 전쟁으로 결정적 기류가 부어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오래될 것 같다”며 “미국이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았지만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석했다.

공공요금 인상 속도 못 댔는데...고삐 풀린 물가 폭등세

원자재 가격 올라 생산자물가 사상 최고
소비자물가도 4%대 상승률 이어갈 전망

전기·가스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죄다 오르며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도 바빠, 자칫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공공요금 상승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06.17달러로 연초 대비 38.1% 뛰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톤(0)당 1013.35달러로 20.08% 올랐다. 호주 뉴캐슬 현물 기준 전력을 연료탄은 1당 336.63달러로 67.03%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은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이 줄며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에 에너지 공기업의 연료비 부담이 커져 공공요금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막대한 연료비 부담에도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요금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며 전력을 팔수록 손실이 늘고 있다. 지난 2월만 봐도 전력 구입에는 7조5836억원을 쓴 반면, 판매로 올린 수익은 5조4767

억원에 그쳐 2조원 이상을 손해 봤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요금 동결은 결국 공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추후 세금을 투입해 보전하거나, 뒤늦게 요금을 높이게 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 지적이 많다.

다만 고물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여지책이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공공요금 관리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새 정부 '경제 원팀'은 고물가·저성장 시대의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엄중한 물가 여건 속에서 원재료비 인상 등 비용 부담을 덜고 서민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새 정부 출범 후 광범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전월 대비 1.3% 오른 116.46(2015년 100기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2017년(1.5%)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이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공산품 지수가 계속 오른 영향이다. 원자재 가격 오른세에 물가 상승 압력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생산자물가는 보통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10년 3개월 만에 4% 넘게 치솟았는데, 4월 소비자물가도 4%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까 규모 축소로 가닥이 잡힌 마당에 공공요금 인상은 그림의 떡이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려우려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추경호 후보자는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라며 “구조를 잘 살펴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키아일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동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셨습니까? 아마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